

하나의 정책 달라진 시각:

안보 위기 속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국내 반일 정서의 재구성

이인우(성균관대학교), 윤은상(성균관대학교)

목 차

I. 문제제기	IV. 대일 정서 변화의 동인: 對중국 위협인식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설계	V. 결론
III. 반일감정과 정권별 대일 접근법	

국문 초록

국제정치학에서 감정은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정서와 여론은 국가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연기와 2022년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국내 여론의 차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시사하며 향후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한일 군사협력은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의해 가장 내홍을 겪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반일 감정은 민족 정체성, 민족주의의 관점 설명되었으나 반일정서를 민족정체성으로 단순화한다면 그 내부의 다양한 인식 변화를 포착하기 힘들다. 이 연구는 민족정체성 기반의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의 정치학(Politics of Emotions)의 이론틀을 차용하여 일본에 대한 여러 감정들이 어떻게 지배적 감정을 이루면서 점차 변화해나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 2019년과 2022년 한일 관계 관련 여론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진행하여 국내 여론의 대일 인식의 변화 추이 및 양상을 분석한다.

I. 문제제기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은 각 정권, 각 진영에 따라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 중 보수 정권은 한미일 군사 협력과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핵억지 능력 강화를 기본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 기조에 따라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한일 안보 협력은 한국의 반일 정서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를 전면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 정색되었던 한일 관계에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 변화도 감지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반일 정서는 한일 군사 협력에 주된 걸림돌이었다. 특히 2013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GSOMIA)

의 체결 연기는 정체성의 정치가 상위정치(High Politics)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핵 능력 고도화는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대두되었다. 공동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북 감시태세와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보상의 이점이 있는 선택지였으나, 한국의 여론은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제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는 일본에 정보를 넘기는 친일적 행태를 보인 이명박 정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침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오히려 2019년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외교 갈등, 수출규제를 둘러싼 무역 갈등, 지소미아 해소 선언 등 안보 갈등을 겪으며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이후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여론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EAI, 2022).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정권별 대북 전략은 한미 동맹이라는 중심축을 상수로 하여 한일 군사 협력 추진 의지와 협력 심화의 정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한일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 정책에 변동이 큰 분야이며 그 변동성은 반일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현 정부의 대일 접근법에 대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반일 정서 혹은 일본에 대한 여론의 이미지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여론의 변화는 단순히 현 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수긍을 넘어 그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안보 정책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감정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세계 안보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반일 정서 또한 크게 민족주의, 정체성의 정치라는 상위 개념에서 다뤄져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반일 정서를 민족주의의 관점으로 단순화하여 한일 관계를 바라본다면 그 내부의 다양한 인식 변화를 포착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안보 위협 속에서 한국의 여론은 한일 군사 협력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둘째, 같은 보수정권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진행하였으나 여론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감정의 정치학(Politics of Emotion)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정권별 대일 접근을 대통령 연설문의 주된 주제를 비교했다. 그리고 동 시기의 기사와 댓글들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하여 주제 및 관심도 변화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내 반일 정서의 변화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여론, 반일 정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역사문제와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민족주의는 타자를 의식하여 자신의 서사를 형성하고 타자와의 갈등을 통해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로 (천정환, 2007)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되어 발전하던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타자가 일본이었다 (전재호, 2019).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의 식민 시기를 거치며 주권을 잃고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당한 우리에게 일본과 우리를 구분하는 과정을 넘어, 극복하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와 반일 감정은 역사 갈등, 민족주의로 치환되어 분석되었다.

실제로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 목적이 협력, 갈등 분석, 개선 방안 등 다양하지만 민족주의에 의한 역사 인식 차이 따른 갈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반일 감정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반일 정서가 유관국들 간의 제도와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Friedberg, 1993; Cha, 1999). 대표적으로 독도문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 한미일 공조 체제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김홍택, 2015; 이성우, 2010),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Kuki, 2013; 신주백, 2014; 이성일, 예동근, 2019). 반면, 한국 민족주의 심화를 일본 역사인식의 우경화와 민족주의화에 대한 한국의 반작용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김용복, 2013).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의 차이는 주로 양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해석의 차이, 1945년 이후 주권국가로 등장한 한국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국제법과 조약의 맹점 상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에 존재하는 반일 정서가 민족주의, 역사 갈등으로 대표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반일 정서를 민족주의로 치환한다면 한국의 반일 감정을 역사적 기억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반일 감정을 한국인의 기억에 내재된 상수로 바라보면 한일 관계의 각 이슈에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일본에 대한 감정의 이슈별 다양성과 시기별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일 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들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역사가 그 자체로서 집단 기억이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으며 역사와 정체성 사이의 간극은 집단 차원의 의식과 함께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민병원, 2014). 반일 감정이 역사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한국인들에게 역사 문제가 반일 감정으로 등치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보다 복잡하며 역사 문제 이외의 요인들도 일본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최종호, 정한울 외, 2014). 실제로 강제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인들은 일본에 책임은 있으나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¹⁾ 이것은 반일 감정이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며 분야의 이슈에

의해 역사문제에 의한 반일 감정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시기 반일 감정에 의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이 연기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을 당시 여론의 반응과 현재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차이를 보임에 주목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은 개개인이 그 국가와 어떤 이슈를 더 중시하는가와 함께 그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역사 문제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변화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 감정의 정치학(Politics of Emotions)의 분석틀 (Gustafsson, 2021)을 차용하여 한국의 대일 정서의 변화와 동인을 분석하였다.

2. 연구 설계

1) 분석틀

감정(Emotion)²⁾은 사회과학에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심리학의 발달과 인지과학과의 융합으로 합리성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감정과 개인의 심리는 행동경제학 등 새로운 분과를 형성하며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갔다. 정치학에서도 감정의 역할이 주목받으며 국제정치학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Ross, 2006, Koschut, 2018). 안보 공동체 형성을 감정을 통한 결속력 유발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Koschut, 2014)와 집단 감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Mercer, 2014)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체성 형성과 결속력 유지를 위해 각 사례가 되는 집단들의 개인에 대한 감정 유발 방식에 주목하지만 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감정과 정치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상징, 의식, 공유된 기억 등으로 대표되는 정체성 형성의 구성요소 사이에 감정이라는 변수를 들여와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주관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집단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다시 의문을 갖게 한다. 동일한 기억과 상징에 대해 표출되는 개인의 감정은 다른데 어떻게 그 감정이 하나의 집단 감정으로 변화하는가?³⁾ 집단 감정

1) 강제징용공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규제를 강화한 2019년 이후 2020년, 2021년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으나 (63%)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과반을 훌쩍 넘었으며 (79.1%), 관계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71%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역사문제에 의한 반일 정서와 다른 사안에서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구분되는 것을 보여준다.

2) 인지과학자들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감정'(emotions)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인 내면에 머무는 것을 '느낌'(feeling)으로 구분한다. '감정'은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행동 등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반면 '느낌'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유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다는 차이가 있다 (Damasio 2007, 38).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제에 따라 상이한 개념에 초점을 두어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감정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면의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의 변화가 감정 변화를 이끈다고 보았다. 이는 감정이 유발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인지(cognition)가 우선(Lazarus, 1982)이라는 인지 과학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며 분석의 적합성을 위해 인지과학에서 사용하는 감정의 개념을 적용했다.

3) 예를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조선' 등의 단어가 보여주

은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취합되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마땅히 느껴야 하는가에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감정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즉, 감정 또한 정치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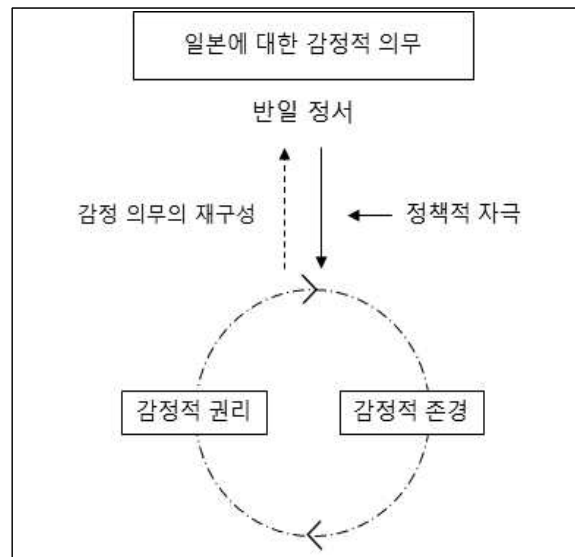
Karl (2021)은 정치학의 특징을 규정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Who gets what, when, how)”라는 문제가 감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감정의 정치학(Politics of Emotions)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이론들을 제시한다. 그는 감정적 의무(Emotional Obligation), 감정적 권리(Emotional Entitlement), 감정적 존경(Emotional Deference)의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적 감정⁴⁾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먼저 감정적 의무는 특정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으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감정을 표출하면 지탄을 받게되는 지배적 감정이다. 감정적 권리는 개인이 특정 감정을 느끼지 않을 약한 권리와 특정 감정을 느낄 강한 권리로 구분된다.⁵⁾ 마지막으로 감정적 존경은 누구의 감정이 고려되고 존경받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해당한다. 사회의 지배적 감정은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적 의무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권리의 주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 속에서 누구의 감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 연구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반일 감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Karl의 분석틀을 차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자극을 또 다른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틀을 일부 변용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정권별 접근법이 다르며 특히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보수 정권의 대일본 접근법은 오랜 시기 축적되어온 한국의 반일 정서라는 감정적 의무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기와 현정부의 동일한 감정자극에 대해 여론의 반응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축적되어온 감정적 의무에 대한 정책적 자극과 그 자극에 의한 감정적 권리와 존경을 둘러싼 여론의 변화, 다시 감정의무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도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듯 자조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4) 집단 감정이 아닌 지배적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감정의 정치학이 개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물과 집단 기억에 의해 탈개인화가 이뤄진 집단 감정(collective emotion)과 구별되므로 개념적 구분을 위해 집단감정이 아닌 지배적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Karl의 논문에서는 권리의 약함과 강함에 대한 정의를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상황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상황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라 특정 감정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1> 반일정서 재구성 과정 도식

2) 분석자료 및 방법

가.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적 의무에 대한 정책적 자극을 분석하기 위해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감정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을 키워드로 한 네이버 기사들과 그에 대한 댓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이유는 연설문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Edward & Barrett, 2000).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그 청중이 국민들이기에 감정적 의무에 대한 정책적 자극의 형태를 잘 보여줄 수 있다. 기사를 수집한 이유는 대중매체가 특정한 이슈를 강조해서 보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문제로 지각하게 된다는 의제설정 이론 때문이다 (반현, 최원석 외, 2004). 즉, 정부의 정책에 신문사들의 기사는 이슈에 따라 보도량의 차이를 보이며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기사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 상황이 아닌 기자의 수사적 상황(rhetorical situation)이 대중에게 전달된다 (Kuypers, 2002). 즉, 보도 프레임은 언론사의 정치 성향, 기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기사의 수용자로서 대중은 다양한 기사를 접하면서 개인의 주관에 의해 기사를 해석하며 이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현저성(salience)에 영향을 미친다. 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어떤 감정이 존중받아 마땅한가라는 감정적 존경 문제를 파악했다. 그리고 기사 수용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 댓글을 수집하여 그 반응 속에서 감정적 권리와 감정적 존경의 상호작용을 파악했다.

먼저, 연설문은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정부시기로 나누어 전기간에 걸쳐 각각

143건, 166건, 4건을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사는 네이버 기사검색을 이용하여 ‘일본’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수집했다. 이명박 정부는 GSOMIA 밀실 합의 논란이 발생해 점화되었던 2012년 6월 26일 이후 6개월을 수집기간으로 설정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발표한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수집기간으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시작한 2022년 5월 10일 이후 6개월을 시기로 잡았다. 또한, 수집된 기사에 있는 댓글을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기사는 7만 6,442건이며, 댓글은 140만 5,008 건이다. 시기별·계층별로 분류된 수집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⁶⁾

[표-1] 시기별·집단별 수집 데이터 분류

시기	정부	언론	시민
이명박 정부	연설문(전 기간), 143건	기사(2012.7-2012.12), 20,847건	댓글(2012.7-2012.12) 104,980건
문재인 정부	연설문(전 기간), 166건	기사(2019.7-2020.12), 35,389건	댓글(2019.7-2020.7) 1,092,611건
윤석열 정부	연설문(전 기간), 4건	기사(2022.5-2022-10.), 20,206건	댓글(2022.5-2022-10.) 207,417건

나. 분석방법

감정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구조적 토픽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⁷⁾ 우선, 정권별 주제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연설문 분석에 STM을 사용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연설문과 기사, 댓글에 대한 토픽모델링은 LDA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델이 다른 이유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각 분석방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STM은 관계 추정이 가능한 로지스틱 정규분포를 사용하여 각 주제의 발현 가능성을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정권에 따라 주제의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LDA보

6)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이용자의 정치 성향이 다르며 네이버의 경우 보수 성향을 띤다고 알려져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디다이드에서 조사한 네이버와 다음의 이용자 정치성향 분석 결과 네이버의 진보 성향과 보수성향의 비율은 41.1% vs 58.9%였으며 다음은 진보 성향이 72.1%로 압도적이었다(배여운, 안혜민, 2021). 그러나 정치 성향과 별개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제가 분류될 때 이슈와 성향에 따른 다른 의견들이 구분되므로 보수 성향 댓글이 과다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이 연구는 감성분석 (Sentiment Analysis)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감성 분석이 감정 어휘 사전을 기반으로 각 텍스트의 감정들을 매칭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의 감정으로 통합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분석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감성분석은 적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지과학에서 정의하는 인지(cognition)과 감정(emotion)의 관계에 따라 댓글에 나타난 의견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변화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지과학에서 정의하듯 감정이 표출되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감정이 인지에서 시작된다면 기사에 대한 해석과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의해, 즉 인지 과정을 통해 한 일 관계에 대한 생각이 댓글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는 STM을 통한 연설문 분석이 필요했다. 반면 LDA는 주제별 강한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리클레분포 (Dirichlet Distribution)을 사용한다. 이 분포를 통해 문서에 잠재된 주제를 추론하므로 신문기사 분석이나 댓글 분석에서의 확증편향을 탈피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이슬, 임강택, 2022). 이 연구에서 기사와 댓글 자료를 분석한 목적은 일본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의 자료들의 주제를 각각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시기별 주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시간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LDA를 통한 분석이 필요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들의 수가 적어 STM을 통한 다른 정부와의 연설문 주제 비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은 LDA로 분석하였다.

수집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몇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쳤다. 정제된 언어로 작성된 연설문과 언론과 달리 댓글은 형식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API와 연동되는 ‘py-hanspell’를 통하여 띄어쓰기나 오타를 교정하였다. 연설문과 뉴스, 댓글의 형태소 분석에는 ‘KoNLPy’ (박은정, 조성준, 2014)를 사용했다. 형태소 분석을 마치고 유의미하지 않은 불용어(stopwords)와 한 글자 길이의 단어를 정제한 후에 분석을 진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토픽모델링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LDA 분석과 STM 분석을 통해 ‘일본’이라는 키워드가 담긴 시기별로 어떤 주제의 변화가 있으며, 어떤 감정의 변화가 포착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LDA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주제 일관성’ (Topic Coherence)를 통해서 최적의 토픽 수를 계산했다 (Röder and Hinneburg, 2015).⁸⁾ 주제 일관성 점수가 충분히 높은 토픽 수를 선정하여 연설문은 27개, 뉴스 기사 33개, 댓글 29개를 선정했다. 토픽 수를 맞추어 LDA 분석을 진행했으며, 등장한 토픽에 대하여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STM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는 R 프로그램의 ‘stm’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searchK’ 함수⁹⁾를 통해서 토픽 수를 먼저 계산한 후 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토픽을 7개로 선정했다.

III. 반일감정과 정권별 대일 접근법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무가 반일인 것은 한국 민족주의가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윤인진, 2007). 일제 식민지 시기 형성된 민족 의식과 주권 의식에 의해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주권을 빼앗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내재되어 있다. 반일감정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일본의 우경화와 이로 인한 독도 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이어져 한국의 반일 감정을 더욱 심화시켰다.¹⁰⁾ 일본에 대한 한국의

8) 각 주제 수 선정을 위한 주제일관성 값은 부록 1 참조.

9) ‘searchK’는 배타성(exclusivity), 의미일관성(semantic coherence), 지속성(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이라는 네 가지 계수를 통해서 최적의 토픽 계수를 찾을 수 있도록 ‘stm’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함수이다. 배타성, 의미일관성, 지속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잔차가 낮을수록 최적의 토픽계수로 판단한다.

반일 감정은 근현대사의 기억 속에서 발현된다. 그 중에는 일본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에 따른 극일(極日)과 분노와 증오에 따른 역사 문제의 청산이 포함된다 (전재호, 2019). 가족의 친일 내력이 정치권의 인사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례나 2004년 위안부를 주제로 한 텔런트 A씨의 누드집 촬영,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반일감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과거 일본의 행태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우경화된 일본정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출한다면 이는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며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위안부, 강제 징용공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된다. 즉, 반일 정서는 한국사회에서 마땅히 느껴야 할, 그리고 느끼지 못하면 비난받아야 할 감정적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일본 접근법은 어떠한가? 특히 일본과의 안보협력에서 한국의 정권별 차이는 어떠했는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 의해 정권별로 차이를 보여왔다. 그 중 보수 정권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왔으나 한국의 반일 정서는 한일 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권은 유럽 연합의 등장과 기능주의적 관점에 힘입어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또한 이러한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그 와중에 일본에서는 고노 담화 등 일본 정치권에서의 과거사 반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경화가 시작되었으며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시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이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 역사 갈등은 본격화되었다. 대북 협력 기조를 이어가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일본의 교류와 경제 협력은 발전시켜왔으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대북, 대일 기조는 북한의 1,2차 핵실험이 진행되었던 노무현 정권까지 유지되었다.

반면 햇볕 정책을 펼쳤던 진보 정권 시기에도 연평 해전과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에 대해 당시 보수정권으로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제적 제재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때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북 군사억제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했다. 이명박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협정 체결 추진은 북한의 핵실험과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안보 정책에서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2012년부터 보통국가를 목표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자민당 정권에 대해 한국 여론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크게 우려하였고 이는 지소미아 협정 체결에 대한 민간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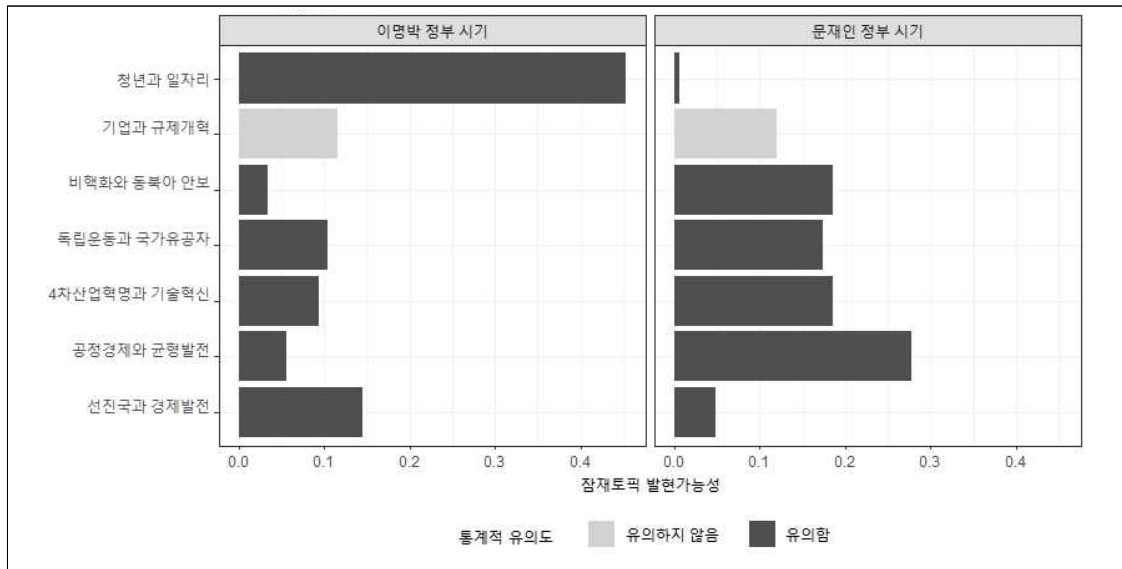
10) 2000년부터 2013년에 걸친 기사들에서 일본과 연관된 단어의 연관 값이 독도(8위), 역사(10위), 위안부(13위), 교과서(14위)로 나타나며 2013년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역사문제에 의한 반일감정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기영, 2017).

정권의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의 차이와 대일 접근의 변화는 이후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탄핵 정국을 거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과 핵실험 중단, 비핵화를 위한 1,2차 북미 회담까지 중재하며 남북 대화를 이어갔다. 반면 일본과는 박근혜시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 발표, 강제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역사 갈등은 다시 이어졌다. 특히 일본이 강제 징용공 배상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것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며 역사 갈등에서 경제 갈등으로, 다시 안보 분야에서의 불협화음으로 나타나며 한일 관계는 전례없이 경색되었다.¹¹⁾ 반면 2022년 등장한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정권의 대북 정책에는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은 한국의 반일 정서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의 경우 대북 억제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을 설득하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즉, 한국 내 반일 감정이라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 의무를 고려한 보수 정권은 이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국내 반일 정서의 변화를 분석하기에위해 먼저 정권별로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발신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STM 분석 결과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간 정책 강조점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독립운동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제가 이명박 정부시기보다 더 높은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선진국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한민족과 동포에 대한 언급을 연설문에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Global Korea”를 슬로건으로 삼은만큼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주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과 1,2차 하노이 회담 등이 이뤄졌던 문재인 시기 남북 대화가 곧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연설문에 더 많이 포함했음을 의미한다.

11)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제훈, “[단독] 미·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거듭 제안…문재인 정부 ‘수용 불가,’ 「한겨레」, 2022.03.30.<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36846.html> (검색일: 2022.11.24.)



<그림 2>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설문 STM 추정 결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대북 억지력을 증가시키려 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는 일본과의 역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최대한 피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안보 정책에 있어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하지만 한국의 반일 감정을 고려 했을 때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제 인 정부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일본과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역사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문제를 강조하면서 한일 안보협력과 남북 관계의 거리를 두려는 정치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위와 같은 차이는 한국인의 정체성의 분화와 분화 된 정체성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 연구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한민족 정체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과 남한을 구분짓는 대 한민국 정체성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원택, 2007; 정한울, 2017). 보수 정권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주장하는 반 면 진보 정권에서 임시 정부,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연설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 은 진보정권의 한민족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이전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억제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 의 차이가 있다면 전례없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북한을 억제하면 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있 는 한국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의 주된 메시지는 이명박 정 부와 다를 수밖에 없다. LDA를 사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주제는 아래와 같다.

[표-2]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 LDA 결과

주제	상위 10개 단어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	경제	국민	정부	산업	원전	지원	미래	기술	규제	민간
독립운동과 자유, 평화	자유	평화	국민	국가	해결	독립 운동	독립	세계	변영	존경
가치와 혁신	자유	국민	경제	평화	혁신	가치	세계	기술	산업	보편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전체 주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민족보다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제의 연설문이 적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전체 연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달리 독립운동과 자유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이 아닌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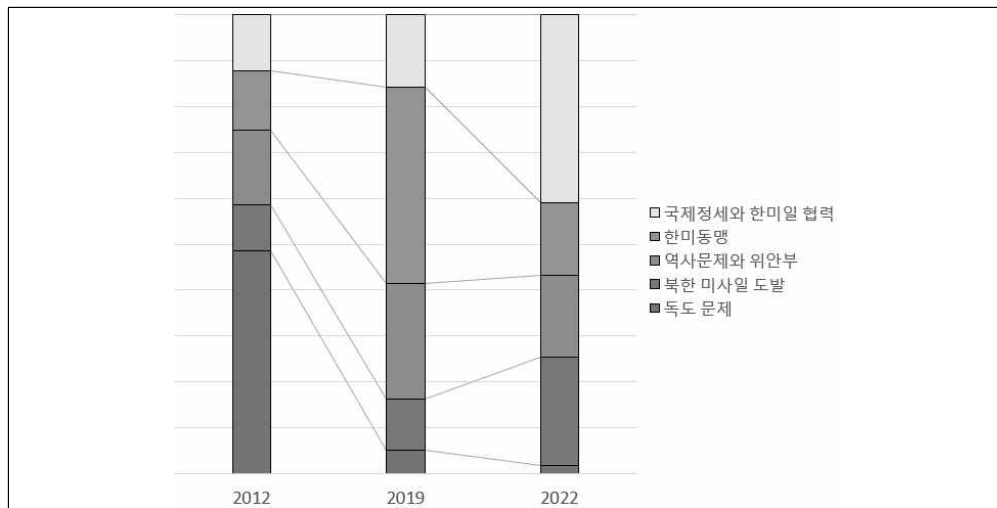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민족 정체성을 부각하여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주제에 자유라는 가치를 덧입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일 감정이라는 한국 내 일본에 대한 감정의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관련 주제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반일 감정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IV. 대일 정서 변화의 동인: 對중국 위협인식

보수정권의 한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는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감정인 반일감정에 정책적 자극으로 작동할 것이다. 반대로 지배적 감정은 아니지만 민족 정체성에서 분화된 국가 정체성과 그에 따른 감정적 의무의 변화는 오히려 진보 정권의 대일 강경책에 대한 비판으로 드러날 수 있다. 분화되는 정체성은 곧 감정 의무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 가치 판단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권리가 작동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와 댓글에 대해 실시한 결과값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2012년의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기사가 압도적이었으나 2019년과 2022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주제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정세와 한미일 협력, 북한 미사일 도발을 주제로한 기사 보도량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역사문제와 위안부 관련 기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동맹 관련 보도량이 보수정권인 이명박, 윤석열 정부 시기의 보도량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한미 동맹의

기사는 동맹 강화에 대한 기사라기 보다는 동맹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사가 압도적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북한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중단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던 시기였다¹²⁾.



<그림 3> 기사 LDA 주제 분포¹³⁾

윤석열 정부시기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기사가 대폭 줄어든 반면, 국제정세와 한미일 협력,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기사량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미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곧 한미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보다는 한미일 협력을 주제로한 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보도량의 변화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일 협력, 한미동맹, 북한미사일 도발이라는 안보 문제에 대한 기사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양안 관계의 악화와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대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가 2012년과 2019년과 달리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역할이기에 주제들의 증감 추이가 현안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안보 이슈에 대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기사 보도량이 연평도 포격과 핵실험이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월등히 증가했다는 것은 안보와 북한 억제에 대한 방법의 객관적인 차이도 있지만 보도의 관점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언론사의 2012년과 2022년 한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보도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다.¹⁴⁾ 즉,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반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대응 발언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반대입장

12) 부록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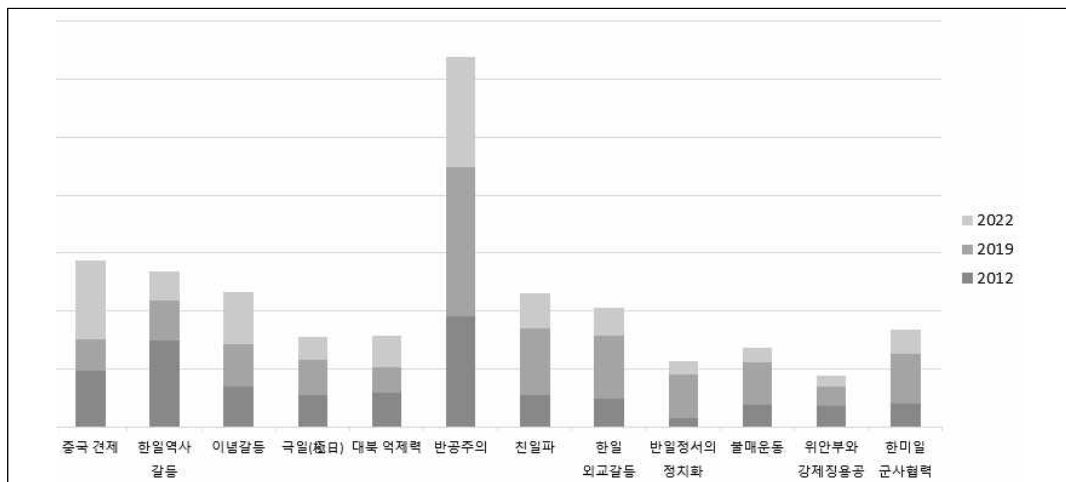
13) 기사에 대한 주제 수는 33개지만 한일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제들은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Topic 2의 경우 영화, 공연, K팝 등 문화 예술과 관련된 주제이며 지역 행사 등의 주제 등도 분류되어 나왔다. 이러한 주제는 본 연구가 파악하려는 한일관계와 반일 정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관련 있는 주제들을 5가지로 추려냈다.

14) 부록 2.2

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지소미아 이외로 추진하는 미사일 정보 공유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보다는 기존 정보공유협정의 한계와 이에 따른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프레임과 보도량의 증가는 한일 관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역사 이슈에 대한 보도량 감소와 안보 이슈에 대한 보도량 증가는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별개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에 대한 보도 프레임에 역사 문제에서 기인하는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사를 수용하는 대중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림 4>는 주제별 댓글 수의 차이를 보여준다.¹⁵⁾ 한일 역사갈등과 위안부와 강제징용공 관련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묶이지 않은 것은 댓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공 문제는 2019년 한일 갈등의 기폭제가 된 이슈로 해당 이슈를 특정한 댓글들이 따로 주제를 구성할 정도로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별개로 한일 역사 갈등 관련 주제는 독도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아우르는 더 넓은 범주의 역사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극일(極日)은 일본에 대한 질투심과 부러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시민의식, 제도 등을 배우자는 것과 관련된 주제이다. 이념 갈등과 반공주의는 각각 비슷한 맥락의 주제이지만 이념 갈등 주제에서는 정권의 성향에 상관없이 양 진영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반면 반공주의 주제 내에서는 진보정권에 대한 원초적이고 맹목적인 비난이 주를 이룬다. 반공주의와 관련된 댓글은 전체 수집 대상연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네이버 기사에 대한 댓글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기존의 여러 분석과 부합하며 반공주의로 따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주제들에서 정치 성향에 따른 편향(bias)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댓글 LDA 주제 분포¹⁶⁾

15)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기임을 감안했을 때 댓글의 절대적인 수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이슈별 댓글 수를 수집된 댓글의 수로 나눠 비율을 비교하였다.

댓글 또한 기사와 비슷하게 역사 문제에 대한 댓글은 줄어 들고 안보 문제 관련 댓글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한일 역사 갈등, 친일파, 위안부와 강제징용공의 주제들이 각 정권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목할 점은 중국 견제라는 주제의 댓글이 2022년에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며 전체 주제에서 빈도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혐오 감정이 배태되어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표-3).

[표-3] 윤석열 정부 시기 중국 견제관련 댓글 내용

일자	댓글 내용
2022.05.28.	중국 쳐들어오면 그날로 중국 공산당 붕괴되고 인민들 해방시켜 주는 날이지, 중국 독재 정부 이제 붕괴되려나 보다. 역지를 쓰는 것을 보니 동서로 강대국의 압박으로 우리 정부의 태도도 좁지만,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외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2022.09.19	한미일 동맹 파이팅 윤 대통령 파이팅 무식하고 더러운 좌빨 척결
2022.09.21	대만 중광전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세계 편에서 지원해야 하며 준전시계엄으로 반도에 모든 쟁가 조선족을 자국민에게서 분리. 통제해야 한다 더불어 더불 M 번 당들이 인권 인류애.. 등 발짝 할게 뻔한데 이것이 이적 간첩행위의 반증이다. 멸공

반일 정서의 정치화라는 주제는 2019년 댓글 수가 폭증했는데, 역사 문제에 의한 일본과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 보복의 원인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주권 국가 간의 합의를 먼저 파기한 한국 정부에 있음을 주장한다(표-4).

[표-4] 2019년 반일 정서의 정치화 관련 댓글 내용

일자	댓글 내용
2019.09.04	왜 일본이 경제보복을 했는지 그 원인은 알고들 이런말 하나..이 나라가 먼저 국가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강제징용 몇명때문에..이런 일을 당하게 만든문제인 정권이 초래한거라구..
2019.07.28	한일간의 경제구조상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한국인 수입상, 운송인, 유통업자, 도소매판매업자 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 (중략).... 특정국가에 대한 불매운동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30년전에 입증된 사실들을 감성팔이에 선동당하는 국민들 보면, 참 북한국민들이랑 비슷한 속성이 있다고 본다. 그 국민들이 그 국민들인 거지, 어디가겠냐. (생략)

기사와 댓글의 LDA 분석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한국 내 역사 문제에 의한 반일

16) 댓글에 대한 주제 수는 29개지만 기사 LDA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제는 제거하였다.

정서가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 전반에서의 일본에 대한 비판 논조가 한일 안보협력에서는 점차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특정 사안별로 어떤 감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의 감정적 존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자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 자극과 기사에 대한 반응은 감정적 권리와 관련있다. 즉, 2012년 이명박 정부 시기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안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와 역사 왜곡에 대한 분노를 느끼겠다는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안보협력 부분에서 반일 감정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협력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즉,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대한 적극적 감정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역사 문제에 의한 반일 감정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대일 정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반일 감정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일본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 상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본에 대한 한국 여론의 감정 변화와 그 동인을 분석했다. STM 분석결과 보수 정권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 정권은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정권별 정책 차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의 대일본 접근법의 차이는 감정의무로서 작용하는 반일 정서에 자극을 가한다. 그러나 기사와 댓글들에 대한 LDA 분석 결과 이러한 정책적 자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 문제에 따른 반일 감정은 아직 상존해있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반일 감정이 안보 협력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의 주된 원인은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댓글 LDA를 보면 반공주의 관련 주제를 제외하면 중국 견제를 주체로한 댓글이 전체 수집연도에서 가장 많았으며 2022년에 급증하였다. 이는 사드(THAAD) 갈등과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와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민족 정체성의 약화와 대한민국 정체성의 강화이다. LDA 분석 결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기사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민족적 동일성보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에 대한 동일감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일 관계에서 역사문제의 현저성(salience) 감소이

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역사 문제와 다른 현안을 구분하는 감정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함의를 종합하면, 현재 한국의 여론은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하여 민족적 염원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보다는 남한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의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대로 중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진보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한중 관계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과 중국이 결속함에 따라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심화될 수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감정의 정치학의 분석틀에 따라 일본에 대한 감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때 텍스트 주제어 분포 양상을 이용하였으나 그 감정들 간의 인과추론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즉, 주제들의 분포 양상의 시점별 변화를 토대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감정들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정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사와 댓글에서의 주제어 분포 양상과 일본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을 얻으면서 역사 갈등에 대한 관심도는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중국의 위협인식이 있을 수 있고, 극일(極日)이라는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일본과 대등해 졌다는 자신감에 의한 변화일 수도 있다. 또한 주제 내에서 강조점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서 동일한 주제 내에서 어떻게 감정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적 토픽모형(Dynamic Topic Modeling: DTM)을 활용하여 주제 분포 이외의 주제 형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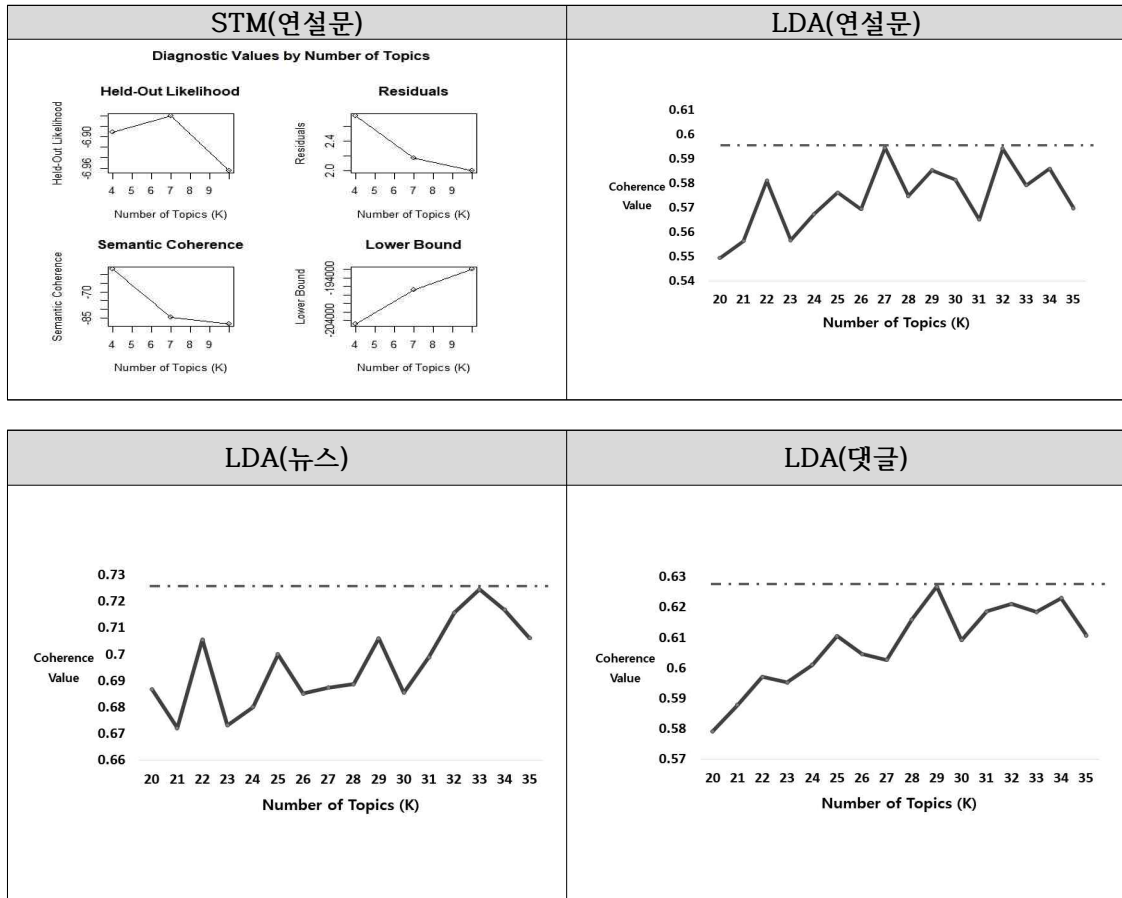
참고 문헌

- EAI 이슈브리핑, 2022.11.24.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 정책으로 이어질
까?,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1455&board=kor_issu
ebriefing](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1455&board=kor_issu
ebriefing)
- 강원택. (2007). 제1장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강
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 김용복. (2013).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와사회, 0), 36-62.
- 김홍택. (2015). 독도문제와 협력적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40.
- 민병원. (2014). 감정의 국제정치이론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의
탐색. 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 23.
- 박은정, 조성준. (2014).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 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33-136.
- 반현, 최원석, & 신성혜. (2004). 뉴스의 속성과 2 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 위도 핵
폐기장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5-102.
- 배여운, 안혜민. (2021.02.19.)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첫 댓글’ 영향력?.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5273&plink=SEARCH
&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lv-contain
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5273&plink=SEARCH
&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lv-contain
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손기영. (2017). 기억되는 과거의 과잉 (過剩): 국제정치의 시간성 (temporality) 과 반
일정체성의 장기지속 (longue durée) 및 위안부 문제. 아태연구, 24(2), 41-68.
- 신주백. (2014). 한일간 역사문제와 외교안보의 분리? 분절?. 역사와현실, (93), 3-12.
- 예동근. (2019). 아베 정부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한일관계의 딜레마. 동북아 문
화연구, 58, 229-242.
- 윤인진. (2007).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한국사회,
8(1), 5-29.
- 이성우. (2010). 독도문제와 한,미,일 공조체제의 미래. 국제지역연구, 13(4), 421-443.
- 이제훈, “[단독] 미·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거둬 제안...문재인 정부 ‘수용
불가,’ 「한겨레」, 2022.03.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368
46.html](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368
46.html) (검색일: 2022.11.24.)
- 전재호. (2019). 한국의 반일 (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한국과 국
제정치, 35(2), 113-147.
- 전재호. (2019).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한국과국제
정치(KWP), 35(2), 113-147.
- 정한울. (2017).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 부
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평화연구, 25(2), 43-86.
- 최이슬, & 임강택. (2022). 한국 언론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조명· 보도하는가:

- LDA 를 활용한 신문기사 주제어 분석, 2000-2020. 북한연구학회보, 26(1), 247-287.
- 최종호, 정한울, & 정현주. (2014).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협력, 그리고 정체성. 국제관계연구, 19(1), 41-76.
- Cha, V. D.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p. 206).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masio, Antonio 저. 임지원 역. 2007. 『스피노자의 뇌: 기쁨, 슬픔, 느낌의 뇌과학』. 서울: 사이언스북스.
- Edward III, G. C., & Barrett, A. (2000). Presidential agenda setting in congress. In J. R. Bond & R. Fleisher (Eds.),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pp. 109~133). Washington, DC: CQ Press
- Friedberg, A. L. (1993).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3), 5-33.
- Gustafsson, K., & Hall, T. H. (2021). The Politics of Emo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o Gets to Feel What, Whose Emotions Matter, and the “History Problem” in Sino-Japanese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5(4), 973-984.
- Koschut, S. (2014). Emotional (security) communities: The significance of emotion norms in inter-allied conflict manage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0(3), 533-558.
- Koschut, S. (2018). The power of (emotion) words: On the importance of emotions for social constructivist discourse analysis in I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21(3), 495-522.
- Kuki, S. (2013). The burden of history: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what Japan must do to move forwar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45-256.
- Kuypers, J. A. (2002). Chapter One: Understanding Media Manipul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Press bias and politics: How the media frame controversial issues* (1-25). Greenwood Publishing Group.
- Lazarus, R. S. (1982). Thoughts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7(9), 1019.
- Mercer, J. (2014). Feeling like a state: social emotion and identity. International Theory, 6(3), 515-535.
- Röder, M., Both, A., & Hinneburg, A. (2015, February). Exploring the space of topic coherence measures. In Proceedings of the eigh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pp. 399-408).

Ross, A. A. (2006). Coming in from the Cold: Constructivism and Emo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2), 197-222.

〈부록 1〉 STM, LDA 잠재토픽 개수 선정



부록 1.2 기사 LDA 대표 기사

부록 2.1

한미연합연습 명칭은 '지휘소훈련'...'동맹' 표현 안 써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연습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크게 반발하자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동맹'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미관계가 더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동아일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렬... 한-미 입장 차이 너무 커

19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결렬됐다.

⋮

미국이 제시한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미의 견해차가 너무 큰 것이 결렬의 이유로 추정된다.

BBC 코리아

부록 2.2

韓日, 첫 군사협정 나오나?..정부, 독도와 투트랙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이름만 거창할 뿐 단순한 국방협력"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

"독도 문제 등은 일본에 명확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라고 관철시키면서 실무적으로 주장하고 안보적으로 필요하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제안으로 두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이달내 예정된 체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05.19. 아시아 경제

국방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韓美日 모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데 대해 국방부는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욱이 티사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주고받는 식이어서 모두 실시간 공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2022.11.14. 아시아 경제
